

# MB정권 심판투쟁 '땃' 올라

노동과 세계 | 승인 2009.10.15 12:34

"MB정권 심판하겠다"

263개 대중단체 모여 반MB공동투쟁본부 출범



반MB공동투쟁본부 출범식이 열린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출범식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MB정권 심판투쟁이 본격화됐다.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 반민중 정책에 분노한 대중조직들이 힘을 모았다. 이명박 정권 심판,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이하 '반MB공투본')가 출범했다.

대다수 대중조직들이 결합한 반MB공투본은 이명박 정부를 '폭력 학살정권, 반민주 반민중 정권'으로 규정하고 "이명박 정권 퇴진만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중생존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단정했다.

- <반MB공동투쟁본부, 민중 12대 요구안>**
- ▲ 부자감세, 4대강 사업중단 민생예산 배정하라
  - ▲ 노동운동 말살정책 중단,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 ▲ 비정규직법 개악 중단, 정규직화 시행하라
  - ▲ 쌀 생산비 보장하고 대북 쌀 지원 재개하라
  - ▲ 용산참사 해결하고 철거민 생존권 보장하라
  - ▲ 취업 후 상환제 그만 말고 등록금 반값 시행하라
  - ▲ 등록제 그만 말고 SSM 허가제 실시하라
  - ▲ 공기업 민영화 중단하고 공공서비스 확충하라
  - ▲ 1회용 인턴 중단하고 청년고용 보장하라
  - ▲ 국민감시 언론탄압 민주과파 중단하라
  - ▲ 남북대결 중단하고 평화협력 추진하라
  - ▲ 아프카니스탄 재파병 시도 중단하라

이들은 ▲부자감세, 4대강 사업 철회, 민생 일자리 등 서민예산 확대 ▲민주주의 파괴, 국민탄압 중단 ▲용산참사 해결, 철거민 생존, 서민 주거대책 보장 ▲부자정책, 재벌탐욕이 초래한 경제위기의 서민 전가 반대 ▲대북 쌀 지원 법제화, 농민 생존권 보장 ▲남북대결 정책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추진 규탄 등을 공식 요구하면서 MB 심판투쟁에 나섰다.

반MB공투본은 또 "우리는 이명박 정부 심판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해 단결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를 위해 하반기 MB심판투쟁 총력전을 펼친다는 결의와 함께 오는 11월과 12월, 반MB공투본과 민주노총 등이 공동 주최하는 민중대회 등을 연속 개최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반MB공투본'에는 한국 사회 변화와 진보를 위해 투쟁해 온 대중단체, 진보정당, 사회단체 등을 총망라한 26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한편, 이명박 정부의 살인적인 반노동정책에 맞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동총력전도 가시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15일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한국노총의 정부여당과의 정책연대 파기 결의와 총파업 투쟁 선언에 따른 양대 노총의 정책연대 및 공동투쟁 방침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맞선 양대노총의 정책연대와 공동투쟁도 전면화되고 있다.

<채근식/미디어국장>



노동과세계 k11@nodong.org

---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